

시론

작지만 강한 대학, 교육 혁신의 상징 올린 공대



주정민

전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 파견교수

전 세계 대학이 혁신하고 있다. 현재 대학 교육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온 교육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 올린 공대이다. 올린 공대는 1997년에 설립해 2002년에 개교했다. 하버드 등 미국 주요 대학이 1800년 전후에 문을 연 데 비하면, 대학의 역사가 짧다. 입학 정원이 75명에서 300여 명이 재학한다. 작은 학부 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이다. 그러나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20여 년 만에 아이비리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올린 공대는 F.W. 올린 재단이 설립했다. 미국 공대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교를 추진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 공대에 충격을 주자는 의도도 있었다. 그래서 전통 공대의 모든 것을 뒤집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 대학은 출발부터 달랐다. 개학 1년 전인

2001년에 30여 명의 예비 신입생을 뽑았다. 그리고 "올린 공대를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이들과 교수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수요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대학 커리큘럼을 완성했다.

올린 공대는 기존 대학과 달리 없는 것이 많다. 모든 학생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학비가 없다. 대학에서 교수의 직장을 평생 보장하는 종신 교수제(tenure)가 없다. 교수들은 5년마다 재계약한다. 전공은 있지만, 학과가 없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이고, 융합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 다.

신입생을 뽑는 방식도 독특하다. 1차는 서류전형으로 선발한다. 2차는 1박2일 동안 엄격한 검증시간을 갖는다. 첫째 날은 팀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음 날은 그 내용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협업능력과 소통능력을 확인한다. 그리고 4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과 열정을 살펴 본다.

교수채용 과정도 기존 대학과 다르다. 대부분 대학은 통상 교수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도나 연구비 수주 능력을 본다. 그러나 이 대학은 후보자를 캠퍼스로 초청한다. 그리고 하나의 일을 함께하도록 해 협업능력과 적극성을 평가한다. 전문가 능력보다는 학생 감독과 조력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교육과정도 기존 대학과는 정반대로 운영

한다. 올린 공대에 입학한 신입생은 1학년 때 실습을 하고, 2-3학년에 이론을 배운다. 실습을 먼저 해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4학년 때는 'SCOPE'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4-5명이 한 팀이 되어 기업 현장에 가서 직접 제품을 개발한다.

올린 공대의 가장 특징적인 교육은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Project-Based Learning)이다.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단계별로 학습을 한다. 1학년 때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고민한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를 고도화해 4학년 때는 완성된 실용 제품을 출시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교수는 학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작은 대학이기 때문에 가진 장점도 많다. 교수가 학생을 잘 알고, 학생의 요구를 신속하게 교육에 반영한다. 학생은 언제든 교수를 만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다. 그래서 학교의 규모나 학생 수를 늘리지 않는다.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올린 공대의 혁신 교육은 변화를 지향하는 한국대학이 주목해야 할 점이 많다. 철저하게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교수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이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社說

결국 투기 의혹...무안 뿔흙 불법성토는 복마전 수준

무안군 남양신도시 오룡2지구 인근 농지에서 이뤄진 대규모 뿔흙 불법 성토가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의혹으로 번졌다. 무안군의 불법 행위 목인 논란에 우량농지로 준공 승인, 공익직불금 지급 등으로 얽히고설킨 복마전 수준이다.

본보 집중 취재에 따르면 뿔흙 불법 성토가 확인된 일로 말미암아 일원 농지 38필지(8.8ha) 가운데 현장조사 적발(2023년 3월)을 기점으로 6년(2017-2023년) 사이 매매 또는 분할된 필지가 26곳(68%)에 달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이 제한되는 데도 소유주 중 타 지역 거주자가 상당수여서 석연치 않다.

해당 농지는 성토를 통해 성인 남성 키를 웃돌 정도로 지대가 높아진 상태다. 농가주택 건축 시 영산강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유지 도로를 접해 건축하기 시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우량농지 조성사업 개발 행위를 낸 5필지의 경우 2023년 준공 예정인 영산강변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강변도로 일대다. 실제로 일부는 2020-2021년 사이 3채의 농가주택을

건축했다. 주택을 지으면 농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땅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준공된 주택에 규격 이상의 관경(관의 직경)으로 상수관로가 설치된 점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주택 수를 감안하면 과다하다. 소유주들의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사코 부인하지만 실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택지개발지구인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단지, 근린시설 등과 2km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변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개선됐다. 영산강 조망권도 확보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 당국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애초에 뿔흙 불법 성토부터 조직적이고 다분히 의도된 행위였다. 법률 위반 등 불·탈법, 민·관 유착 가능성까지 총체적 부정,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 땅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농지취득제도를 보완해 절대농지는 주말농장 용도로도 살 수 없도록 강화했어야 하지는 않았나.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변화와 혁신 선언한 농협 여전히 기대에 못미쳐

농협은 올해 '2030 비전'을 선포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기치로 희망농업, 행복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0여 년 협동과 상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환골탈태해 거듭나겠다는 임직원의 강력한 의지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다.

고물가 흐름에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이상기후 현상 등이 함께 덮쳤다. 국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영남·무안·신안)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질책했다. 지자체와 지역조합 간 협치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자는 취지의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추진은 미흡하다고 했다. 같은 당 문근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

는데, 올해 산정 기준이 바뀌어 지원이 줄고 농가 부담은 더욱 늘었다며 추궁했다.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취임, 4년의 임기를 시작한 강호동 회장은 비전 2030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농업인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동반성장을 지속하며 미래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농협으로 도약할 것이라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농협은 농민과 농·축협이 중심이다. 전국적으로 1천111개의 조합과 20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두고 있다. 활력을 잃고 흔들리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며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 마주했다. 주무부처의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한다. 허물 없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

문화난장



이세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팀원

사회복지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삶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 그 중 먹먹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어른스러운 아이들'을 만났을 때다. 오래전에 만났던 고등학생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을 대신해 자갈 키워주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다. 얼마 전 만난 스무살의 풋풋한 친구는, 자신과 단둘이 사는 동생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터에 뛰어들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거짓말처럼 똑같았다. "당연히 해야죠."

이처럼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들 '가족 돌봄 아동'이라고 한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엔 이를 규정할 명확한 법이나 지원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가족 돌봄

'가족 돌봄 아동'을 알고 있나요?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치부진한 법안 제정과는 별개로, 가족 돌봄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 가사,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청년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민간에서도 가족 돌봄 아동을 찾아다니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록우산에서는 나이 제한으로 제도 밖에 벗어나 있는 '가족 돌봄 아동'을 위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정책, 인식 개선 캠페인, 지원법 제정 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 지원 조례'를 지정해 조사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 대상, 조건, 기준, 지원 내용 등이 달라서 오히려 혼선을 빚을 때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족 돌봄 아동을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분류해 지원금을 주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다.

제도적 개선, 복지 지원과 함께, 우리의

사회적 시선과 인식도 변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해 국가별 인식과 대응 수준에서 가장 낮은 7단계로 분류되었다. 어른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철이 일찍 들었다, 효자·효녀다'라는 칭찬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족쇄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 본인들이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는 말과 시선으로 힘든 상황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스스로 고립돼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뿐, 정작 필요한 관심과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우리가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겪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조금 더 많은 관심으로 아동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들에게 머리틀 쓰다듬으며 칭찬하는 손길이나, 힘든 마음을 만져주며 께잡고 물어봐 주는 손길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독자투고

요즘 도시생활에 적응을 느끼고 귀향하거나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는 귀향붐이 일고 있다. 이들 전원주택 대부분은 고풍스런 형태로 산속이나 마을과 동떨어진 경치 좋은 자리에 위치해 감탄을 연발하게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옥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농촌지역 곳곳에 한옥마을이 조성 중에 있어 도시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전원주택과 한옥마을 상당수가 도심과 달리 농촌 동네와 동떨어진 인적이 뜸한 야산지대에 위치해 밀집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방범용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도 많을 뿐 아니라, 외지인 소유자가 별장 개념으로 주말에만 왕래를 하는 사례도 많아 차질 검은 손길이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그나마 몇세대가 단지를 이뤄 마을 형태로 조성돼 상황은 조금 낫지만 농번기철에는 빈집률이 범죄가 기승할 우려가 있어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범죄없는 농촌 마을 조성 함께 노력하자

물론 이들 전원주택이나 한옥마을 단지가 강도나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 발생빈도가 도심 주택가에 비해 높고 낮을 수 없지만 빈집률이 높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조금만 주의하고 주변을 살펴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 범죄자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측면에서 집 주변에 모형CCTV나 각종 경보기 작동음을 표시하는 알람판을 설치하거나 빈집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라디오를 켜두는 것도 권해되고 싶다. 무엇보다 집안에 현금과 귀금속은 두지 말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다.

도심지역 공동주거와 달리 농촌지역 외딴 전원주택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CCTV와 방범창, 이웃간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 설치가 시급하다. 얼마전 경북 지역에서 검거된 농촌

빈집률이 범죄자의 경우에도 폐쇄회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만을 표적으로 삼아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대부분 농촌지역은 특성상 아침에 들녘에 나가 해질 무렵 다시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절도범죄의 표적으로 전락할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범죄예방에는 너나 없다. 경찰의 범죄예방 노력과 농민들의 신고 체계가 조화를 이룬다면 범죄없는 평화로운 내 가정, 내 마을을 만들 수 있다.

경찰에서도 외진 농가주택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빈집률이 절도예방 순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원주택 인근 원주민들 또한 주변에서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이나 낯선 차량을 목격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죄없는 농촌 마을 조성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덕철·무안경찰서 통탄치안센터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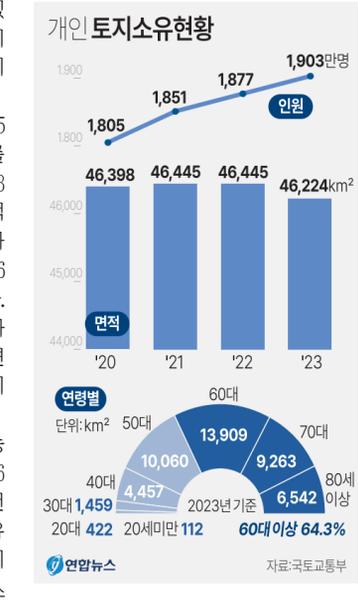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국민 37%가 토지 소유...보유자 64%가 60대 이상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33만명 중 37%에 해당하는 1천903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보유 인구는 전년 말보다 1.3%(26만명) 늘었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4만6천224km로 전년보다 221km(0.5%) 줄었다. 가구별로 따져보니 우리나라 전체 2천301만가구 중 62.1%인 1천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전년 말(62.0%)보다 0.1%포인트 높아졌으며,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개인 토지 보유자를 연령별로 따져보니 60대 이상 소유자가 64.3%를 차지한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의 48.8%(2만2천563km)가 농림지역이다. 이어 관리지역(31.3%), 녹지지역(12.6%) 보유가 많았다.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7천327km로 1년 새 62km(0.8%) 증가했다. 비법인 보유 토지는 농림지역이 56.8%로 가장 많고 이어 관리지역(21.9%), 녹지지역(11.9%)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실현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